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2016. 01. 12 | 송민정 외 새사연 노동연구팀 | smj@saesay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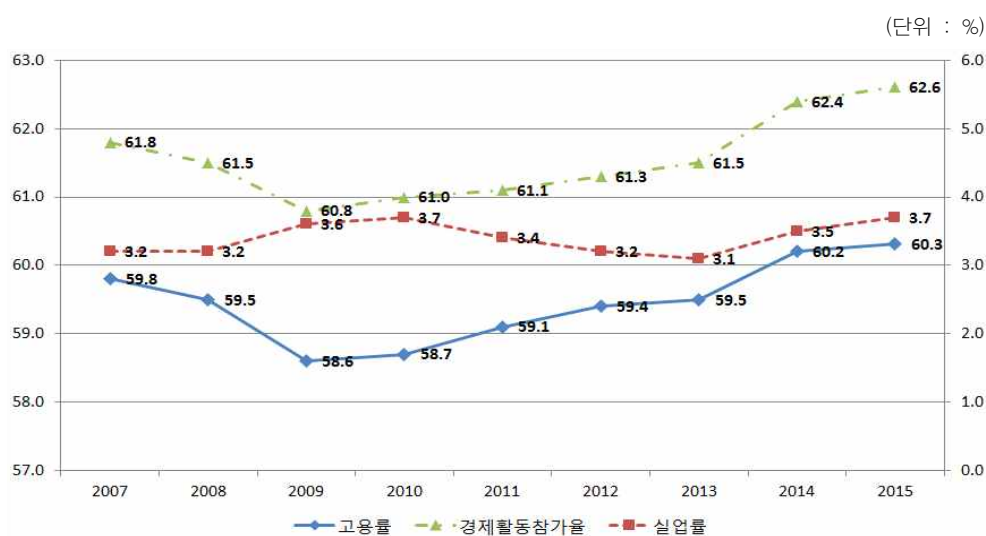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5년 국내 노동시장 동향 분석

1) 고용지표 개선 속도의 저하

2015년의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이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자 수는 지난 해 같은 시기(2014년 1월부터 11월) 대비 월평균 32만 2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고용지표의 개선 정도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림 1. 주요 노동시장 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2015 (단, 2015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참고 : 좌측 축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 우측 축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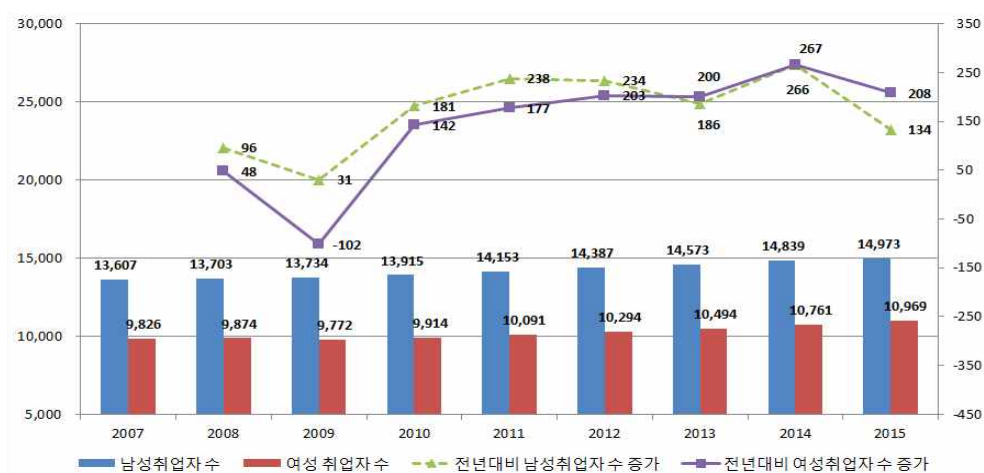
위 그림 1을 참고하면, 고용률은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 60.3%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실업률은 3.7%로 오히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는 일자리 증가 폭이 2014년 동일한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일자리의 수는 53만 3천 개였다.

일자리 증가 폭 축소의 원인은 2015년 들어 경제성장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비 규모 축소 및 대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그로 인한 기업의 투자 축소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와 일자리 증가 폭 축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고용지표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취업자 증가 폭이 큰 수준을 유지했고, 중·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 고용률 하락을 저지한 여성층과 중고령층 취업 증가

아래 그림 2에 나타나듯이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19만 5천 명 증가였다. 이는 2014년의 전년 대비 여성 취업자 증가 폭에는 못 미치지만,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2만 8천 명이 증가한 남성 취업자 수보다는 훨씬 큰 수준이다. 2015년에 들어서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유지되었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고,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 지표를 기록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증가 폭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2015 (단, 2015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참고 : 좌측 축 - 취업자 수 / 우측 축 - 취업자 수 증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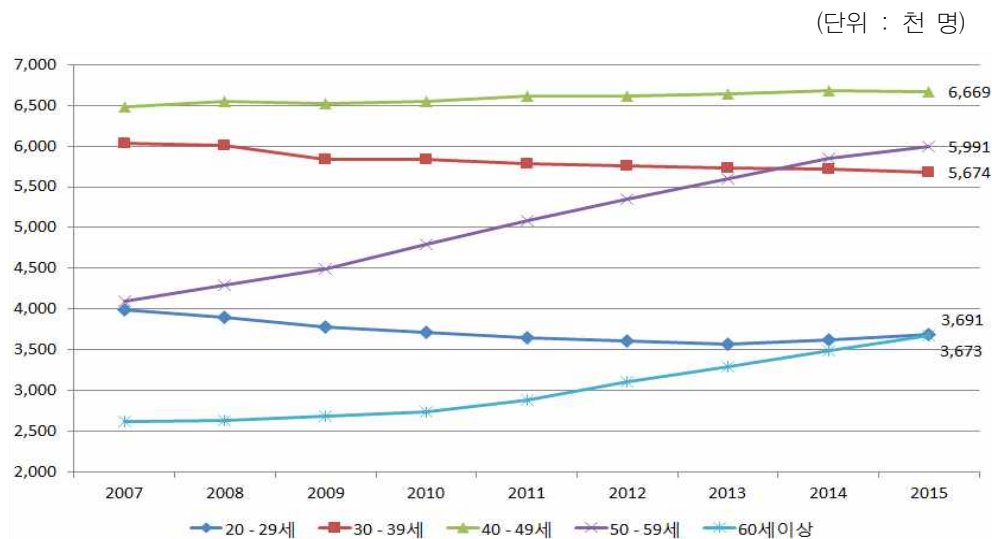
1) 2014년 1월-11월 기준 고용률 60.3%, 실업률 3.6%, 경제활동참가율 62.7%



하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50%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기간 기준 남성 고용률 71.1%보다는 20%p 이상 낮다. 또한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 역시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월평균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20대 취업자의 수는 369만 1천 명, 30대 취업자 수는 567만 4천 명,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 9천 명, 50대 취업자 수는 599만 1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67만 3천 명으로 나타나는데,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대는 6만 4천 명, 30대는 -4만 1천 명, 40대는 -1만 4천 명, 50대는 15만 명, 60세 이상은 16만 3천 명으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의 증가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 별 취업자 수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07-2015 (단, 2015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이 같은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몇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5년 현재에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규모와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60세 이상 취업자 수보다 137만 4천 명이나 많았지만, 2015년 현재(1월에서 11월 기준)는 1만 8천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노동시장 내 여성과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여성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또한 남성 일자리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에 일하는 이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측면에서도 2015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169만 1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9만 6천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노동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점도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령층 노동자의 증가 역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크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산업별 고용동향 - 제조업의 고용 리드

표 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산 업	2012	2013	2014	2015	2015년 증감
전 산업	24,681	25,066	25,599	25,942	343
농업, 임업 및 어업	1,528	1,520	1,452	1,372	-80
광업	15	16	13	13	0
제조업	4,105	4,184	4,330	4,480	15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6	90	83	92	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3	73	87	88	1
건설업	1,773	1,754	1,796	1,821	25
도매 및 소매업	3,689	3,660	3,792	3,784	-8
운수업	1,380	1,413	1,407	1,409	2
숙박 및 음식점업	1,906	1,971	2,098	2,176	7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0	692	714	771	57
금융 및 보험업	842	864	837	789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485	508	533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28	1,022	1,025	1,044	1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16	1,173	1,180	1,246	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51	966	957	936	-21
교육 서비스업	1,744	1,748	1,807	1,815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9	1,554	1,693	1,768	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9	392	394	427	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86	1,312	1,299	1,276	-2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6	172	116	83	-33
국제 및 외국기관	9	7	14	18	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2-2015 (단, 2015년은 1월-11월의 평균값임)



위 표 1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이듯이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도에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이다. 2015년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8만 명으로 전년대비 15만 명이 나 증가했다. 즉, 2015년은 제조업이 고용증대를 리드한 해였다.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년 대비 7만 8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으며, 그 다음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7만 5천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숙박 및 음식점업의 월평균 임금은 131만 2천 원으로 전 산업 월평균 임금 229만 7천원에 비해 훨씬 낮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2014년까지는 제조업과 함께 취업자 수의 빠른 증대를 이끌었지만, 2015년 들어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의 여파로 인한 보건업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메르스 사태가 끝난 이후 점차 취업자 수 증대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민간 수요의 확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온 산업으로 메르스 여파가 사라지면 다시 제조업과 함께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이다.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8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증대될 경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다음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부터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에서는 2015년의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는 경제와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개선 속도 역시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유지했는데, 여기에는 여성 취업자의 증가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우려는 더 커졌는데, 시간제를 통한 여성 일자리의 증가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좋지 않은 일자리가 확대되었다면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노동시장의 문제점 - 비정규직과 여성고용²⁾

1) 증가하는 비정규직, 감소하는 좋은 일자리

2015년의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질적 수준의 우려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고용지표는 2014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했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동향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2015년 취업자 증가를 이끈 여성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 상당수는 임금이 낮다. 또한 비정규직도 좋지 않은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일자의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 확대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노동시장 내 일자의 질적 수준 개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양적 측면이 개선에 정책이 집중되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같이 오래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 역시 계속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로 부상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4와 같이 201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 통계를 따를 경우 627만 1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노동계의 통계를 따를 경우 868만 5천 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45.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확인 된다³⁾.

그림 4. 정부와 노동계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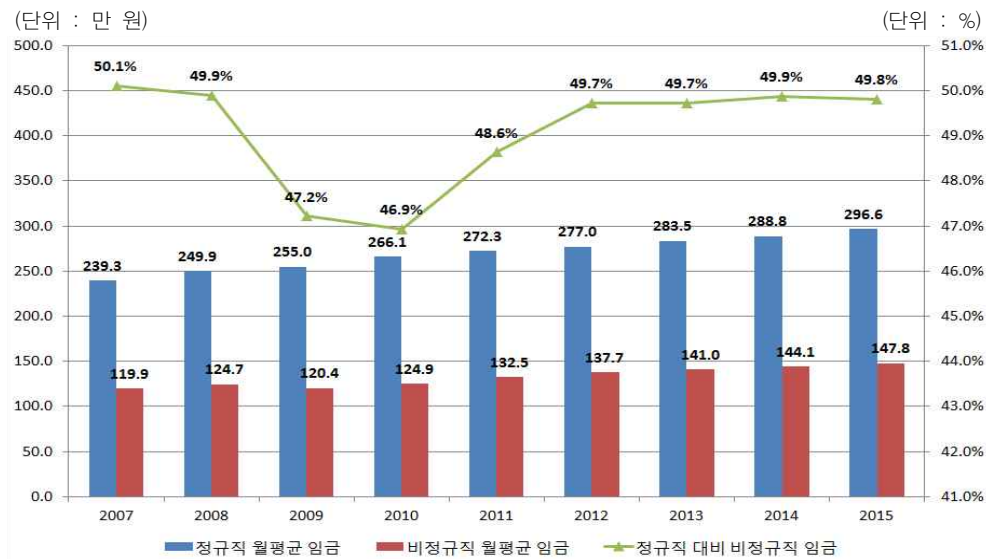
참고 : 각 연도 8월 기준

- 청년고용의 문제도 심각한 화두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독립된 보고서로써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 정부 통계와 노동계 통계의 주요 차이는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여부임. 정부 통계의 경우 한시적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전형 일자리라는 고용형태를 통해서만 비정규직을 개념화하는 반면, 노동계의 통계에서는 이와 함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으로 봄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5의 분석 결과 2015년 8월 기준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96만 6천 원과 147만 8천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정규직의 두 배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참고1 : 각 연도 8월 기준

참고2 : 좌측 축 - 임금, 우측 축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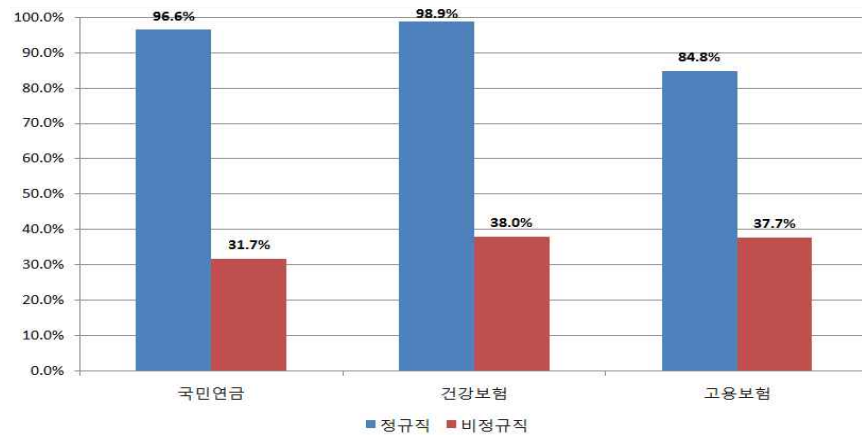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크다. 나아가 사회 보험 지원에서 역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림 6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 가입에 있어 직장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0%도 되지 않는 이 들만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 사항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높은 고용 불안정성,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림 6.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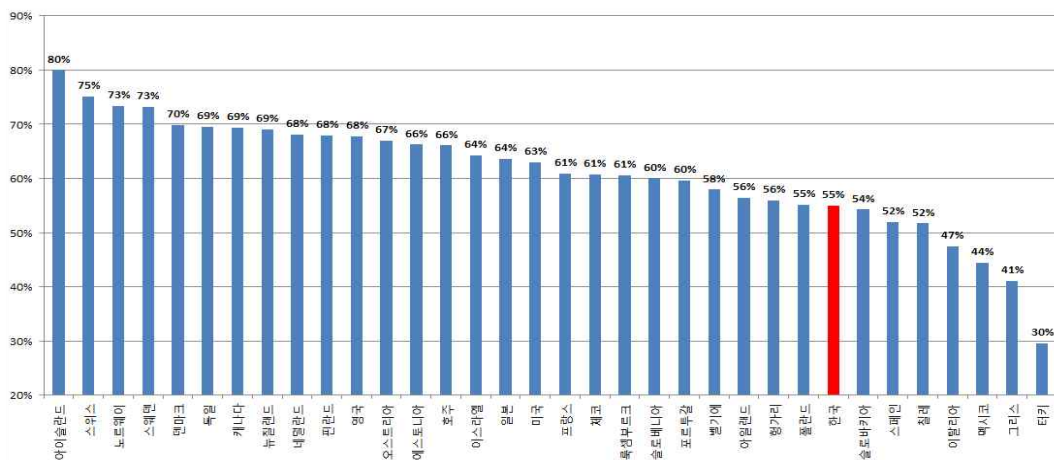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2) 여성 고용률의 증가와 대비되는 일자리 질적 하락

비정규직과 함께 여성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않고 있는 문제이다. 먼저 한국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최근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남성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7. 2014년 여성 고용률 국제 비교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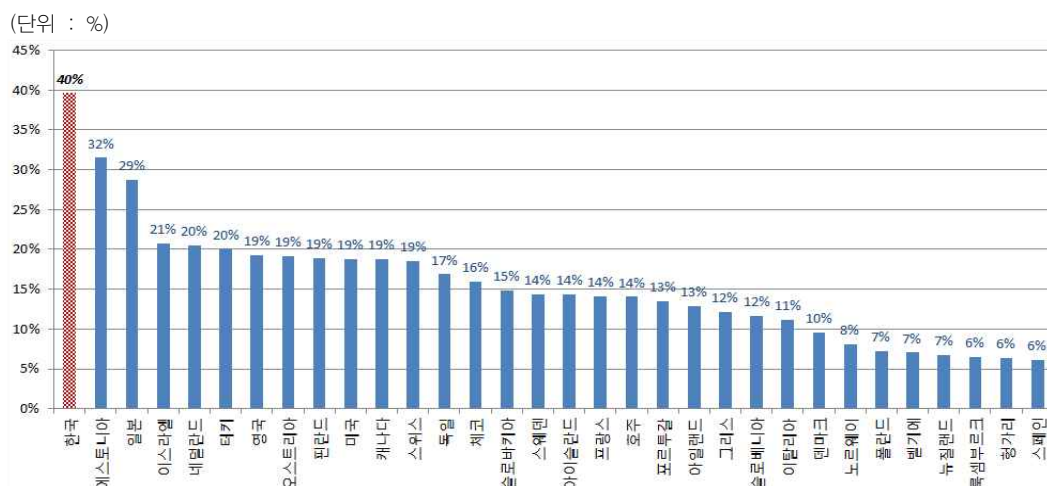


그림 7에 나타난 OECD의 2014년 통계 결과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낮은 여성 고용률의 원인으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국내 연령대 별 통계를 참고하면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생성되는 30대에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20대 후반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게 되면서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전 정부부터 수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M자형 여성공급곡선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실제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있어 육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높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국가의 통계가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비교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했을 때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2010년 성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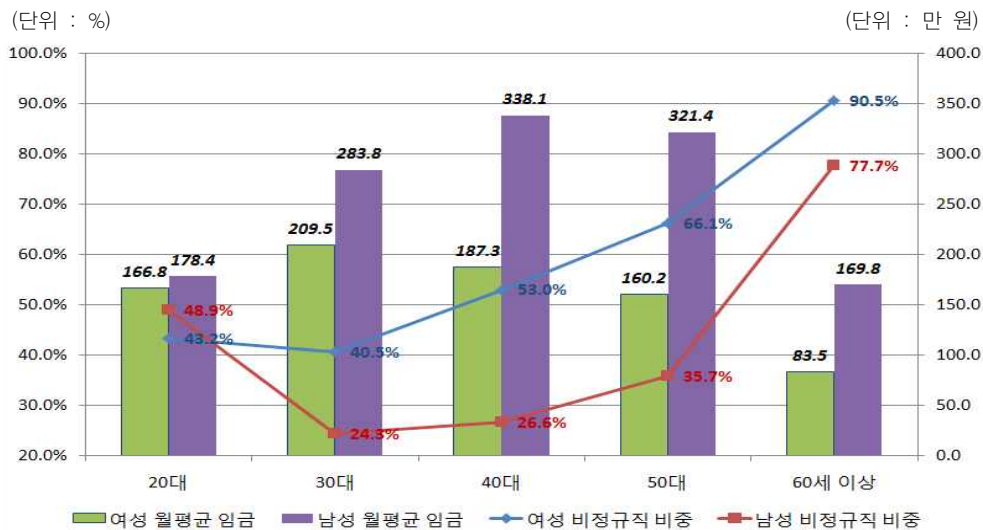


출처 : OECD 홈페이지



성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일부 반영하고 여성들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기 쉬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이와 같은 높은 성별 임금격차는 경력 단절 시기인 30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것을 그림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정규직 여성이라도 노동시장을 떠났다 다시 돌아올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 9.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활용 추계

참고 : 좌측 축 - 비정규직 비중, 우측 축 - 임금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계속될 경우 여성들 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사회 전체의 불평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보다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낮은 여성 고용률이 지속되게 할 위험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6 노동유연화

정부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보다 쉬운 해고, 그리고 보다 길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새로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 아닌,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더욱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더욱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일단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해 지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듯하다.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여러 공익 광고들 역시 이런 정부의 기대를 투영하고 있다. 해고가 쉬워져서 보다 쉽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기업이 해고가 힘들어서 고용을 적게 하고 있고, 이런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이다.

지금의 저성장 문제는 일자리 창출 동력 둔화로 인한 소비 침체에 따른 것과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쉬운 해고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 증가시키고, 전체 임금 소득이 감소해 임금근로자의 소비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대기업들에 큰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이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연 그 정책들은 일자리를 기대한 만큼 확대시켰을까? 사상 최대의 유보금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해고가 쉬워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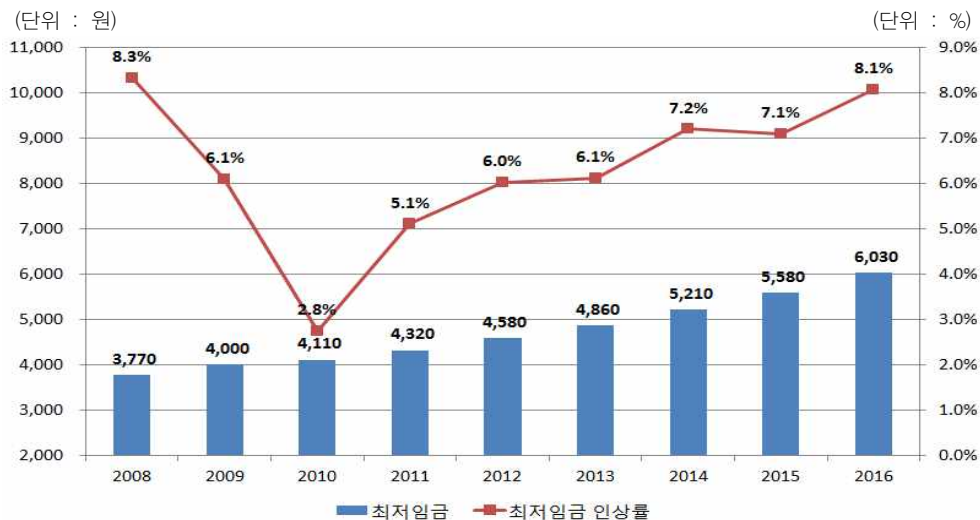
즉, 현재 노동유연화 방안 보다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이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경우 이로 인한 소비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다시 그것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층,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확대는 보다 큰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소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새롭게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이나, 과거 영국, 그리고 최근의 미국까지 이런 최저임금의 소비 확대 기능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림 10. 연도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적용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참고 : 좌측 축 - 최저임금, 우측 축 - 최저임금 인상률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예상되고 있는 2점 대 후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면 그에 따라 취업자 증가 속도 역시 조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와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영향이나,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과 고용 모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노동시장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의 연장은 고용불안정성을 전체 임금근로자에게로 확대시키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



불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상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만들어 새로운 노동시장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여성, 청년 등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과 관련된 노동시장 문제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양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이런 일자리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단기 노동시장 양적 지표 개선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뿐 장기적인 일자리 확대나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동시장은 일자리 증가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의 양적 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확산되어 한계 상황에 있는 중고령, 여성, 청년들을 유입해 고숙련 노동자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보다 수치적인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자 모두로 하여금 더 높은 숙련에 투자하도록 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할 경우 노동자들의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비가 투자로 이어지는 내수 진작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경제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방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사람들이 바라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방향은 무엇일까?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과 관련해 “2년 일하고 싶은가?”, “4년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 4년 일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가?”,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는가?”를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고용 창출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 속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